

1995년도

정보통신정책방향



경 상 현 (정보통신부 장관)

우리협회 등 20여개 정보통신산업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정보통신부장관초청오찬회'가 지난 1월 13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있었다. 430여명의 정보통신관련업체 임직원들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된 이 오찬회에서 초대 정보통신부 경상현장관은 새해 정보통신정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관련자료를 입수, 전재한다. - 편집자주 -

새로운 질서의 형성

변화하는 국제환경

냉전체제의 몰락이후 세계는 미·소 중심의 양극체제로부터 미·주, 유럽, 동북아 경제권 등 다극체제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념경쟁시대에서 경제실리우선의 무한경쟁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커다란 흐름을 타고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생산은 물론 시장과 경쟁 모든 부문에서 국경의 제약없이 사람, 자본, 정

보가 자유로이 이동하는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실질적 의미의 국경없는 세계로 이행하고 있고 기업들의 경제활동도 다국적화하고 있다. 또한 "제3의 물결"을 통한 정보화의 진전으로 경제구조도 정보지향, 정보 의존화되는 지식·정보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급변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현상이 일반화되면서 인류의 생활방식과 소비형태 및 생산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큰 변혁기를 맞고 있다.

새로운 국가질서의 확립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세계화를 표방하는 일련의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는 제도와 의식, 관행의 개혁을 통해 모든 분야를 세계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나라와 국민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조직의 개편이 먼저 단행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세계화과제 추진의 핵심부처로서 우리나라가 21세기초에 세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육성의 주무부처로서 시대적 요청에 걸맞는 종합적이고 일원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정보의 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는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원활한 정보의 전달 및 처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원절약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정보통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중점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

정보통신정책의 기본방향

수요측면에서의 정보화촉진정책과 공급측면에서의 정보통신산업 육성정책을 상호연계하여 상승효과를 극대화 하였고 공공부문의 정보화 지원과 민간부문의 정보화 촉진을 통해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토양이 될 수요를 창출하고 이 국내수요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공급능력 제고와 기술의 고도화를 이룩하여 세계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하여 이러한 전략구현의 근간이 되는 사업으

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을 활용하였다.

정보통신망과 H/W, S/W, DB 등이 상호연계된 시스템적인 특성을 살리고 컴퓨터·통신·방송간 상호융합화에 따른 멀티미디어의 출현에 대응하는 유기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발휘토록 하였고 정보통신분야 조직개편과 기능조정에 맞게 종래 서비스(3차)위주 정책에서 제조업(2차)을 포함한 정책으로 정비·발전시켰다.

기술과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제약없이 정보통신분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위하여 정부는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정보통신관련 법령·제도를 정비·보완하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시범 및 홍보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표준화와 민간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기초기반기술 및 대규모 공통기술의 개발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특히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건의를 적기에 정책에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주요정책 내용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서울-대덕간 선도시험망을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등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을 선도케 하고, 초고속국가통신망은 전국 12개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고속통신망을 우선 건설하여 기존의 주민등록전산망 등을 고속통신망에 시범 수용하며, 초고속공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육성의 주무부처로 시대적 요청에 걸맞는 종합적이고 일원적인 정책을 수립, 정보의 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는 정보사회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중통신망은 대량의 통신수요지역부터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첨단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용토록 하겠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덕연구단지를 정보화 시범지역으로 활용하고 초고속정보통신전시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정보이용능력 제고와 이해증진을 도모하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겠다.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초고속망 이용기술개발 등 민간의 창의와 다양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공모방식 등을 통하여 학생·중소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초고속통신망 설비투자에 있어서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

공공부문, 산업부문 및 지역의 정보화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상승작용을 통해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공공정보화는 기 추진중인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공정보의 연계활용 및 안정적 국가망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간전산망 관리센터(NCC)를 설치·운영토록 하며, 국토지리정보망, 의료정보망 등 새로운 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전산화와 관련한 국가예산의 확대방안을 강구하겠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정보화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농어촌지역의 원격진료서비스 및 무료컴퓨터 교육 등을 확대하고 지역단위정보센터의 확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보화를 가속화하여 물류정보망, 운송정보망의 구축을 지원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 설비 구매지원과 국책연구소의 기술지원을 확대하겠다.

또한, 정보화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정보의 공개 및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전산망 안전·보안 등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이용의 규범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가사회 정보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겠다.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미래 핵심산업인 멀티미디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초고속통신망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수요를 개발하고 주문형비디오(VOD), 유선방송 등 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시장수요를 창출하며, 멀티미디어 사업의 전담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산업화를 지원하고, 멀티미디어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겠다.

지식집약적인 소프트웨어(S/W)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를 적극 유도하고 중소개발업체를 장기자리로 육성 지원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하며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국책연구소의 자체개발 소프트웨어를 일반에게 무료공개토록 유도하고, 유통전문업체의 창업 지원 및 불법유통 S/W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유수의 연구소·기업 등과 전략적 제휴를 장려, 추진하겠다.

데이터베이스(DB)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산망조정위원회의 공동접속 권

고 등 기능을 활성화하여 정부 및 공공 기관 보유정보의 공개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보급을 촉진하고 데이터베이스관리기술(DBMS)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겠다.

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휴대전화기 등 세계 일류상품화가 가능한 품목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토록 하고, 국산주전산기 구매자금 지원 등 내수시장의 확대를 지원하며, 민간기업의 해외 통신사업 진출과 전자교환기 수출 및 해외 현지합작공장 설립 등을 지원하겠다.

정보통신사업의 경쟁촉진

시외전화사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등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정보통신사업에 창의와 활력을 유입하겠으며, 시외전화 신규사업허가는 사업자 수, 번호계획, 허가시기 등 기본방침을 조기 확정하여 추진하고,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는 기존 방침대로 하나의 사업자를 우선 허가하되 점진적으로 경쟁을 확대해 나가겠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통신의 주식을 매각하고(전체의 14%) 한국전화번호부를 민영화하는 등 민영화를 지속 추진하고, 이용약관의 정부승인사항 축소 등 사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대폭 철폐하여 스스로의 책임하에 민간자율적으로 사업을 경영토록 보장하며, 통신망 상호접속 및 회계분리제도 확립 등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해 정보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경쟁의 확대에 부합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요금제도 등을 개선하겠다.

전파, 방송 신매체의 보급확대

전파를 이용한 새로운 정보매체의 이용기반 구축을 위해 무궁화위성의 발사('95.6)·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계기로 우주통신개발시대에 본격 진입하겠다. 무궁화위성의 성공적 발사를 위하여 위성체제작 및 발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위성관제 및 운용기술을 습득토록 하며, 첨단인 통신·방송체제 구축을 통하여 국내의 TV난시청을 해소하고 디지털위성방송 등 다양한 고도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 아울러 아·태지역 위성통신협회의 주도적 운영 등 위성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동북아 동일문화권 형성에도 기여토록 하겠다.

종합유선방송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송망 구축 등을 적극지원하고 이를 지역정보화의 기간미디어로 육성함과 아울러 통신, 방송의 융합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기술 전문연구소의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주파수 자원관리의 효율화와 전파이용 규제완화를 통하여 전파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겠다.

정보통신산업기반 강화

올해 9,000억 규모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여 컴퓨터, 무선통신 등 방송 등 핵심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겠다. 이를위해 연구개발의 방향을 기업 스스로가 생존력 확보차원에서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정부는 기초, 기반 기술 등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를 연구토록 하며, 국가의 모든 연구개발 능력을 효율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토록 하겠다.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미래 핵심산업인
멀티미디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과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

의 정보통신 관련학과 등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국내외 산·학·연간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WTO체제 출범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인력양성부문의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

국제적인 표준화 동향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국산주전산기 표준제정 등 국내 정보산업육성에 필요한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산업관련 종합 DB를 구축하여 관련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겠다.

또한, 정보통신사업 구조를 건설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창의적이고 신축성있는 중소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지원

우리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세계 정보망의 동북아 거점화정책을 추진하여 정보유통의 세계화 및 산업진출 여건을 조성하겠다. 아·태지역 정보통신기반(APII)구축을 주도하기 위해 아·태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를 개최('95. 5월, 서울)하고 「APII 협력센터」의 설립 및 서울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저궤도위성통신(LEO) 사업참여, 국제해저광케이블망 구축 등 통신사업자의 해외통신망 확충을 지원하겠다.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국과 정부간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산업진출에 필요한 자금(EDCF)지원을 확대하겠다.

WTO기본통신 대자간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긴밀한 쌍무협의를 통하여 통상마찰을 사전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통신협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앞으로 본격협상에 대비, 시장개방 전략을 수립하며 표준화, 형식승인, 연구개발 보조문제 등 예상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토록 하겠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기구 활동의 전문화를 위해 정부, 산업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를 풀(Pool)제로 운영하는 등 국제협력의 전문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

맺음말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세계화를 위한 강력한 통치이지의 표현이며 그중에서도 정보통신부의 발족은 더욱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정보통신부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관련업무를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추진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정책노선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보완·발전시켜 국가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민간부문에서도 이러한 정부정책의 취지를 감안하여 업계역량을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WTO체제 하에서는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 스스로가 생존전략으로서 자체 기술개발 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주력해 주기 바라며,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할 애로사항은 수시로 기탄 없이 건의하여 정책에 적기 반영되도록 하고, 외국업체와도 땀땀이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